

대한상의 브리프

노경목 한국경제 기자



제106호 2019년 9월 30일



편집자주

10월 1일은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는 국경절입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반세기도 채 안 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벤처·창업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호는 중국 특파원을 지낸 경제부 기자의 시각으로 중국 경제의 70년 변천사와 시사점을 짚어봤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中 경제 70년사와 향후 예상 진로

시진핑 취임 8개월 뒤 열린 ‘18기 3중대회’(13년 11월) 당시, 언론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해 ‘중국이 예금 금리와 환율 결정을 자유화하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등 시장화·분권화된 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중앙권력과 국영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민간기업은 힘을 잃는 ‘국진민퇴(國進民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오판의 이유는 공산당(정치)이 경제를 지배하는 중국의 경제구조와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세계 2위로 성장한 만큼 기존 중앙집권체제로는 비효율성을 감당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진핑과 지도부는 경제 효율성보다 정치적 결속과 사회 안정을 우선시했다. 때문에 경제분야의 비효율을 감수하고라도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갔다.

우리는 종종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양식에 빗대 중국의 행동을 해석하고 이후 진로를 전망한다. 세계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며 다른 국가들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교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 시야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산당 중심체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는 10월 1일, 중국 경제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는 이유다.

전반 30년 : ‘서방을 추격한다’

중국 경제사 70년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대만 출신 중국 경제 석학인 린이푸 세계은행 총재는 두 시기의 중국 경제정책을 ‘추격 전략’과 ‘비교우위 전략’으로 구분했다. 한국전쟁 이후의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소련의 원조 철회라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처한다.



[중국 개혁개방 전후 경제정책 변화]

추격 전략		1978년 개혁개방	비교우위 전략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	롤모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	
비교우위 없는 자본집약적 산업(중공업) 육성	특징		비교우위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경공업) 육성해 자본축적	
요소가격 통제, 관료주의 확대	결과		세계시장 지분확보, 투자 유치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때문에 서방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경제력의 건설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 인식됐다. **국력의 척도가 되는 철강·조선 등 중공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의 외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올라섰다.** ‘5년 내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내 미국을 따라잡자’는 대약진운동의 구호가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이는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후발 산업국가는 노동력은 넘치지만 자본은 희소하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노동집약 산업에서는 비교우위를 발휘하지만 자본집약 산업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철강과 조선 등 중공업은 설비를 갖추는 데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 산업이다. 이 같은 조건을 무시하고 중공업을 육성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는 경제 전반에 많은 왜곡을 가해야 한다. 우선 값비싼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평가절상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외환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자본 총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빠뜨린다.

비교우위가 낮은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여러 분야의 비용도 통제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임금부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동결해 요소비용을 낮춘다.

이는 중공업 육성 과정에서 개별 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업 손실을 메우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추격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관료주의 병폐와 지대추구를 심화시켰다. **자본과 외환이 희소해진 가운데 이를 분배하는 관료 기구의 권한은 더 커졌고, 이러한 자원을 배정받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관료들은 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후반 40년 : ‘韓·日을 배운다’

추격 모델의 처참한 실패는 굳이 재론할 필요도 없다. 4인방 숙청 등 정치적 격변을 겪고 집권한 덩샤오핑 등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비교우위 모델을 새로운 전략으로 삼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해 이미 성과를 확인한 모델이다. 이는 이후 40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기본전략이 됐다.

비교우위 모델은 저개발 국가가 자신의 비교우위를 십분 활용해 세계 무역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연히 주력 분야는 자본집약의 중공업이 아니라 노동집약의 경공업이다.



[중국 vs. 한국 규제환경 비교]

 중국		 한국
· 2016년 ‘원격의료’ 서비스 본격 도입 ·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 제한 없음	의료	· 시범사업만 20년째 · 개인정보법에 따라 정보 활용 어려움
· 알리바바 온라인 약국 운영 중	유통	·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판매 금지
· 은산분리 규정 없음 ('14년 위뱅크 오픈)	금융	· 작년 일부 완화 (K뱅크 오픈 536일만)
· 전세계 유니콘 기업의 24% (404개 중 98개) · MIT 선정 글로벌 혁신기업 34개	혁신기업	· 유니콘 기업 9개 · MIT 혁신기업 0개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인건비가 중요한 경공업은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수출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기 용이하고, 국내 요소가격을 크게 왜곡하지 않아도 국민경제 전반이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경공업에만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비교우위 모델의 핵심은 축적되는 자본에 따라 비교우위가 생기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한 단계씩 전환을 어떻게 유연하게 이뤄내는가다. 한국과 일본은 '조선철강→석유화학→전자'로 점차 자본과 기술이 고도화된 산업으로 진출하며 국민경제를 고도화시킨 예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이후 중공업 육성을 중단하고 민간중심의 경공업을 집중 육성했다. 부족한 자본·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거대한 내수를 미끼로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합작투자를 유치했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된 요소가격 통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주의적 산업 경영 모델을 해체해 기업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했다.

국가 주도 생태계의 명암과 향후 진로

중국 경제와 산업은 국가 주도로 미국을 위협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도약이 눈부시다. 2014년 정부 주도로 '대중창업·만중혁신'을 기치로 내걸었고, 외투·국내기업 시장 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 도입, 행정규제 폐지, 세금 감면 등 창업 관련 모든 정책을 정비했다.

2018년에는 세계 일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 편리화 조치도 내놨다. 그 결과, 중국은 전세계 혁신기업 50곳 중 34곳(MIT 선정)을 배출하는 혁신강국으로 성장했다.

국가 주도 성장의 음영도 있다. 경쟁력 낮은 국유기업이 부채로 연명하다 보니 금융기구 부실의 문제가 상존한다. 반면,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은 자본 조달이 어려워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부채와 관련된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론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우리의 관심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국가 주도 성장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7월 30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그런 고민이 묻어난다.

회의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금융정책을 유지하되, 공급 측 구조개혁과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민영기업 발전을 위해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제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은 시장의 역동성을 부양하려는 시도다.

또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중국 경제가 6% 이상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시장은 중국 정부가 부채·부동산 주도의 단기 부양책을 지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 정부가 시장참가자의 심리 회복과 민간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개혁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은 답습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내부 구조개혁의 성과 여부에 따라 정부의 'grip'이 조절될 듯하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9월 30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7	2.6	2.8	2.4	2.5
세계	3.7	3.6	3.2	3.5	3.2	3.4
미국	2.2	2.9	2.6	1.9	2.8	2.3
중국	6.8	6.6	6.2	6.0	6.2	6.0
일본	1.9	0.8	0.9	0.4	0.7	0.6
EU	2.5	1.8	1.3	1.6	1.2	1.4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9.4월	5월	6월	7월	8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41	1,183	1,176	1,175	1,209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22	1,076	1,088	1,086	1,137
원/위안	174.4	167.5	166.4	169.8	172.1	170.0	170.9	171.0
원/유로	1,283	1,276	1,299	1,282	1,324	1,327	1,319	1,346
유가(Dubai)	53.8	53.2	69.7	70.9	69.3	61.8	63.3	59.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9.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3.0	2.5	1.4	0.7	1.3	-0.8	0.5	-
소매판매	3.9	1.9	4.3	1.4	3.4	1.2	-0.3	-
설비투자	-1.3	14.1	-3.8	-6.9	-10.0	-9.0	-4.7	-
수출	-5.9	15.8	5.4	-2.1	-9.8	-13.8	-11.0	-13.6
수입	-6.9	17.8	11.9	2.8	-1.9	-10.9	-2.7	-4.2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